1991년 12월 5일 제122회 참의원 국제평화협력 등에 관한 특별위원회

❍ 일시: 1991년 12월 5일(목) 오전 10시 1분 개회

❍ 발언자:

- 야타베 오사무(矢田部理) 의원(정치가, 변호사, 평화운동가, 작가, 일본사회당 소속 참의원 의원, 평화연합 소속, 참의원 체신위원장·건설위원장·징벌위원장, 신사회당 초대위원장)
- 미야자와 기이치(宮澤喜一) 내각총리대신(대장성 관료, 정치가, 자민당 소속 참의원 의원, 경제기획청 장관, 중의원 의원, 통상산업대신, 외무대신, 내각관방 장관, 부총리, 대장대신, 우정대신, 농림수산대신, 재무대신, 자민당 총무회장, 자민당 총재)

❍ URL: https://kokkai.ndl.go.jp/#/detail?minId=112214306X00319911205&spkNum=68&current=25

❍ 해제(개요 및 특징)

야타베 의원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그 보상에 나서고 있음을 지적하지만, 미야자와 총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국교 정상화 등을 통해 북한을 제외하고는 법률적으로 일단 해결되었다고만 반복할 뿐 위안부 문제는 특별히 거론하지 않음.

❍ 주요 내용 번역

▷ **야타베** “총리께서는 전후책임은 이미 완수했다,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?”

▷ **미야자와 국무대신** “평화에 대한 공헌은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”

▷ **야타베** “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요. 전쟁책임을 처리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아직 크게 남아 있는 것이 지난번 본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연행입니다. 100만이 넘는 사람, 조선과 중국 사람들을 전쟁 중에 강제로 연행하여 강제노동시켰습니다. **종군위안부**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종류의 문제는 매우 인도적인 과제이자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. 일본정부는 아직도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. 독일이나 미국조차라고 하면 실례겠지만, 미국도 캐나다도 모두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”

▷ **미야자와 국무대신** “이른바 「국가총동원법」에 의해 징용된 사람들, 그중에서 한국 관련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아마도 그런 분들이 확실히 9만 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, 조사는 계속할 예정입니다. 법률적으로는 말하자면, 우리 선배들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비롯한 여러 강화조

약의 결과로 몇몇 나라와는 배상협정을 맺었습니다. 또한 그 외에 이른바 일중 국교 정상화라든가, 일한 공동성명이라든가,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지고 있던 배상 등에 관한 법률상 처리는 일단 이루어졌습니다. 하나가 남아 있는데,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문제입니다. 그 외 국가와의 법률적인 처리는 일단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.”